

# 아시아 주요국의 대(對)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cjcho@kiep.go.kr

**송영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ycsong@kiep.go.kr

**최윤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yjchoi@kiep.go.kr

**이 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wlee@kiep.go.kr

**정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hwjung@kiep.go.kr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 재정위기로 확산되면서 신흥국 경기마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9년간 최저치인 5%대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대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의 버팀목 역할이 기대되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싱가포르, 중국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점과 활용 가능한 정책을 동원하여, 대인도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일본과 싱가포르는 2000년대 이후 대인도 직접투자 국가별 순위에서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음.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인도 직접투자 규모는 일본의 1/10이며, 국가별 순위도 13위에 불과함.
  - 특히 일본은 공적개발원조(ODA), 싱가포르는 국영기업 등을 내세워 인도 인프라개발 시장 참여는 물론 자국기업 진출지원, 전용공단 설치 등을 가속화하고 있음.
  - 중국은 이미 인도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하였으며, 최근에는 국영은행의 풍부한 자금력을 활용하여 인도 인프라개발 시장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상기 3개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각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 및 전략, 사례 등을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여,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2. 조사 및 분석 결과

### 1) 역사, 정치, 외교적 관계

- 한국과 인도의 역사, 정치, 외교적 유대관계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인도와의 관계에 비해 취약함.
  -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원후 5~6세기 불교의 전파와 교역을 통해 인도와의 교류를 시작하였지만, 1949년 네루 총리의 일본 방문에 이어 우리나라보다 20년 이상 앞선 1952년 인도와 공식 수교함.

- 싱가포르는 영국 동인도회사가 인도를 수탈하던 시절, 대중국 전초기지 조성을 위해 동인도회사에서 파견된 사람들의 주도하에 구성된 도시국가로 1965년 독립과 동시에 바로 인도와 외교관계를 수립함.
- 중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이웃국가로 실크로드, 불교 등을 통해 인도와 교역은 물론 문화적 교류를 매우 활발히 해왔으며, 정부수립 이듬해인 1950년 인도와 수교하였음.
- 우리나라와 인도는 한국전쟁 당시 인도의 의료지원부대 파병, 전쟁포로 처리를 위한 중립국송환위원회 의장국 활동 등을 제외하고는 현대에 와서도 거의 교류가 없다가, 1973년 외교관계를 수립함.

●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보다 양자 정상회담을 늦게 시작하였고 개최 횟수도 적으며, 아직까지 정례화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타 정부 간 협력체제도 상대적으로 취약함.

- 일본은 2005년 이후 거의 매년 양자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장관급 일·미·인 전략대화, 외무장관 전략회의, 차관급 회담 등 정부 간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음. 안보액션플랜, 일·인도 해상훈련 등 안보협력 시스템도 가동되고 있음.
- 중국도 2000년대 이후 거의 매년 인도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고위급 전략경제대화, 장관급 안보대화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인도와 1960년대부터 정상회담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합동장관회의, 의회친선그룹 등을 통한 외교협력은 물론 공군 및 해군 훈련, 안보정책다이얼로그 등 긴밀한 안보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음.

[표 1] 한·중·일 및 싱가포르와 인도와의 관계 비교

	일본·인도	싱가포르·인도	중국·인도	한국·인도
외교관계 수립 연도	1952년	1965년	1950년 1962년 단교 1979년 재수교	1973년
정상회담 -횟수(~2012년) -정례화(연도)	19회 2005년 이후	10회 비정례화	17회 2002년 이후	6회 비정례화
양국 관계 (체결연도)	글로벌파트너십(2000년) 글로벌전략파트너십 (2006년)	-	전략적동반자(2005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동반자(2004년) 전략적 동반자(2010년)
외교협력체제 (개시연도)	양자 정상회담(2005년) 동아시아정상회담(2005년) 일·미·인 전략대화(장관급, 2011년) 외무장관전략회의(2012년)	아세안정상회담(2002년) 동아시아정상회담(2005년) 합동장관회의(2008년) 의회친선그룹(2012년)	전략경제대화(2011년) 동아시아정상회담(2005년) 브릭스 정상회담(2009년)	동아시아정상회담(2005년) 재무장관회의 외무장관회의 장관급 공동위
안보협력체제 (개시연도)	안보협력공동선언(2008년) 안보협력액션플랜(2009년) 차관/고위급회담(2010년) 일·인도 해상훈련(2012년)	공군훈련협력(1970년대) 해군훈련협력(1993년) 싱인 안보정책다이얼로그 (2004년) 대잠수함공동훈련(2007)	평화협력5조항(1954년) 국경지역 군사훈련 및 비행 금지(1996년) 장관급안보대화(2003년)	한인도방산군수협력 (2005년) 차관급 외교안보대화

자료: 저자 작성.

## 2) 경제협력 관계

### (1) 교역, 투자, FTA

- 대인도 교역은 규모면에서 중국이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경쟁력은 일본은 물론 중국에 의해서도 약화될 수도 있음.
  - 수출규모는 2011년 중국이 약 505억 달러로 단연 앞서 있고, 그 뒤를 싱가포르(140억 달러), 한국(127억 달러), 일본(111억 달러)이 따르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수출증가율은 중국(30.1%)과 일본(22.4%)이 우리나라(19.6%)와 싱가포르(15.3%)를 압도하고 있음.
  - 특히 일본은 2007년 이후 수출증가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일본의 대인도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며, 시간이 갈수록 한·일 간 수출경합도 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대인도 수출상위 5대 품목 중 4개 품목이 우리나라와 겹침.
  - 한편 중국과의 수출경합도 지수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대인도 수출상위 5대 품목 중 3대 품목이 우리나라와 겹침.
-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인도 투자를 주도하던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투자비중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일본, 싱가포르 등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1999년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비중은 13%로 투자국별 순위 5위를 기록하였지만, 2000년 4월~2012년 8월에는 그 비중이 0.65%로 급감하고, 순위도 13위로 급락함.
  - 2000년대 이후 같은 기간 싱가포르와 일본의 대인도 투자비중은 각각 10.1%와 7.5%로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일본의 대인도 투자는 2006년 인도와 포괄적 경제적 파트너십(CEPA)을 체결한 이후 급증하여,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 비해 4.6배나 많은 1,800여 개의 진출기업 수를 기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인도와의 FTA를 싱가포르보다는 늦게, 일본보다는 빨리 발효시켰으나, 인도로부터 확보한 양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상품부문 양허수준은 싱가포르가 가장 높은 수준의 양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은 양허품목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양허수준을 확보하고 있음. 관세감축 기간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빠름.
  - 서비스부문은 싱가포르와 일본이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많은 영역에서 양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의 숙원인 인도 화물선 우선적치제도의 미적용 양허를 받음.
  - 또한 싱가포르는 인도와 FTA 협정을 개선하면서 양허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지만, 한·인도 FTA는 2011년 1월 개선 합의 이후 후속 조치를 위한 공동위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음.

[표 2] 한·중·일·싱가포르의 대인도 수출, 투자, FTA 비교

	일본	싱가포르	중국	한국
수출 규모 (억 달러, 2011년)	110.8	140.4	505.3	126.5
수출 증가율 (2007~2011년, %)	22.4	15.3	30.1	19.6
수출 비중 및 순위 - 2006년(% , 위) - 2011년(% , 위)	0.7(24위) 1.3(15위)	2.8(10위) 3.4(9위)	1.5(12위) 2.7(7위)	1.7(10위) 2.2(9위)
수출 품목 및 비중 (2011년, %)	5대 품목 75.3 기계류 36.5 전기기기 13.1 철강 12.3 차부품 7.8 광학기기 5.6	5대 품목 77.1 기계류 22.2 광물성연료 21.7 전기기기 19.8 유기화학품 8.2 플라스틱 5.2	5대 품목 66.2 기계류 25.2 전기기기 20.5 유기화학품 9.2 비료 7.0 철강제품 4.3	5대 품목 63 기계류 15.4 전자기기 14.6 철강 13.7 차부품 12.0 플라스틱 7.3
인도수입시장점유율 - 2002년(% , 순위) - 2007년(% , 순위) - 2011년(% , 순위)	3.2(7위) 2.7(12위) 2.4(16위)	2.6(10위) 3.2(10위) 1.7(20위)	5.0(4위) 11.2(1위) 11.8(1위)	3.3(13위) 2.4(15위) 2.6(12위)
투자 규모 (2011년, 억 달러)	31.1	42.6	0.5	1.3
누적 투자 - 2000.4~12.8(억 달러) - 비중(%) - 순위(위)	134.8 7.5 4위	181.1 10.1 2위	1.35 0.08 34위	11.6 0.65 13위
투자 증가율 (2007~2011년, %)	160	118.6	665	40
투자진출 기업 수 - 전국(2011년, 개)	1,804	110여 개 이상*	30여 개 이상**	387***
FTA협상개시 협상타결(연도) 발효(연도)	2007년 2011년 2월 2011년 8월	2003년 2005년 6월 2005년 8월	-	2006년 2009년 9월 2010년 1월
상품부문양허률**** - 총양허률(% , 연도) - 즉시철폐(%) - 관세철폐및인하 - 양허제외(%)	89.7(2021년) 7.6 82.1(11년간) 10.3	93(2015년)	-	85.5(2019년) 38.4 47.1(10년간) 14.5
서비스부문 양허****	- 11개 분야 86개 영역 - 은행지점 4년간 10개까지 호의적 고려 - 화물우선적취제도 비적용	- 8개 분야 특혜(비즈니스서비스, 건설엔지니어링, 금융, 통신, 운송 등)	-	- 11개 분야 81개 영역 - 은행지점 4년간 10개까지 호의적 고려
FTA 협정 개선 (업그레이드)	-	- 2007년 1차협상완료 - 2010년부터 2차협상	-	2011년 합의

주: \* 기업인들의 자발적 등록 기준으로 국영기업은 대부분 미포함.

\*\*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출장 인터뷰 기준.

\*\*\* 조총제 외(2011) 기준.

\*\*\*\* 인도 측 양허, 금액 기준.

자료: 저자 작성.

## (2) 경제협력 정책, 전략 및 사례

### ① 일본

#### ● 경제협력은 물론 외교안보 등을 포괄하는 정상급 협력체제 확립

- 2006년 일·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은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Global Strategic Partnership)으로 격상시켰으며, 이를 통해 △대인도 ODA 강화 △FTA 추진 △상호 투자관계 강화 △대화채널 강화 △금융협력 및 도시개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경제적 파트너십(CEP)은 물론 외교안보, 과학기술, 지역이슈 협력을 확정하는 등 정상급 협력체제를 구축, 가동함.

#### ● 투자진출 여건 개선 등 일본기업의 대인도 투자확대 지원에 우선 집중

- 포괄적 경제적 파트너십(CEP)의 핵심과제인 상호 투자관계 강화를 위해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추진 △일·인도 FTA 추진, △ODA협력 강화 △JETRO의 일본기업 진출지원 확대 △인도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함.

#### ● 인프라개발 등을 통한 일본기업 진출지원에 ODA를 적극 활용

- 델리, 콜카타, 방갈로르, 첸나이 도시철도 건설, 델리-뭄바이 간 약 1,500km의 고속철도 건설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은 모두 일본 ODA 자금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어, 일본기업의 사업 참여는 물론 인프라개발을 통한 기진출 일본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 인도 주정부와 협력을 통한 일본기업 전용공단 적극 개발

- JETRO, 일본경제산업성 등은 인도 주정부 혹은 주정부 개발공사와 직접 제휴, 혹은 간접 지원 등을 통해 이미 가동 중인 1개의 공단 외 라자스탄, 구자라트, 방갈로르, 첸나이 주에 5개의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개발하고 있음.

### ② 싱가포르

#### ● 이중과세방지조약 및 FTA 적극 활용 및 개선

- 싱가포르는 2005년 싱·인도 FTA 발효와 함께 면세 및 감세 혜택이 보다 확대된 이중과세방지조약을 발효시켜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를 촉진시켰으며, 이후 FTA와 함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조세 감면수준 및 투명성, 양허수준 등을 높여나감으로써 더 많은 상호 투자와 교역을 유도함.

- 장기 투자, 다양한 형태의 투자 등에 국영기업을 전략적으로 활용
    - 항만 및 공항,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은행, 보험, 병원, 통신 등 서비스 분야는 물론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직접투자는 물론 지분투자, 펀드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영기업이 우선 투자 진출하여, 민간 기업에게 우호적인 진출여건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업리스크를 축소함.
  - 다양한 민간협력 채널 구축 및 쌍방향 진출지원으로 시너지 극대화
    - 1일 45편의 항공편 운항, 주인도 싱가포르상공회의소, 주싱가포르 인도상공회의소 등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 등 양국 투자 진출기업 및 기업단체에 대한 쌍방향 지원 강화를 통해 상호 투자를 적극 유도함.
- ③ 중국
- 중·인 정상회담 및 전략경제대화 등 정상급 협력체제 구축
    - 2006년 이후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공동경제그룹, 공동비즈니스위원회, 공동연구그룹, 전략적 파트너십 등 기존 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2011년 고위급 전략경제대화 신설 및 정례화를 통해 매년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 추진함.
  - 국영은행의 풍부한 자금력을 동원, 대인도 인프라개발 부문 집중 진출
    - 2012년 11월에 개최된 제2차 중·인 전략대화에서 중국은 인도의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발전소 건설부문에만 약 36억 달러의 자금조달과 사업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MOU를 인도와 체결함.

### 3. 정책적 시사점

#### 1) 한·인도 정상회담 등 협력체제 구축

- 정상회담의 정례화
  -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인도와의 관계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가 인도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함.
    - 일본과 중국은 인도와 정례화된 정상회담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외교, 안보협력은 물론 최근에는 경제협력을 더욱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
    - 현재까지 구축된 한·인도 간 최고위급 회담은 재무장관, 통상장관, 외무장관 회담 등이며, 이마저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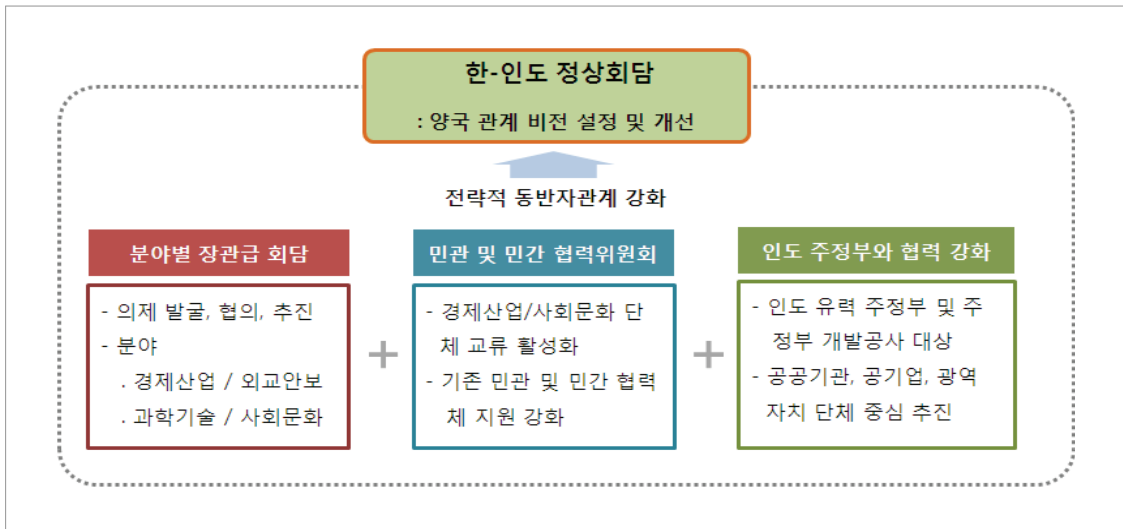
●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및 장관급 협의 정례화

- 한·인도 간 협력체제를 정상회담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2010년 구축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통해 경제협력은 물론 핵발전, 안보 및 방위산업, 문화, 과학기술 및 교육 부문 등으로 협력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만큼 부문별 장관급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활성화해야 할 것임.
  - 현재의 장관급 협의체를 경제산업, 외교안보, 교육기술, 사회문화 부문으로 통합, 개편하여 정례화해야 할 것임.

● 민간 경제협력체 활성화 및 인도 주정부와의 협력 강화

- 지속가능한 민관 혹은 민간 경제협력체를 활성화시키고, 인도 주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임.
  -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하며, 협력사업이 실질적으로 주(州) 단위에서 실행되고, 특히 과도할 정도로 분권화된 인도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본, 싱가포르처럼 주정부와의 협력 강화도 필수 불가결함.

[그림 1] 한·인도 협력체제 구축 및 정례화 체계안



자료: 저자 작성.

2) 한·인도 CEPA 활용 및 효과 극대화

● CEPA 업그레이드 및 IT 전문인력 적극 활용

- 싱가포르가 기존 FTA를 지속 개선하였듯이 일본과 싱가포르보다 낮은 상품부문의 양허율 제고는



물론, 인도국적 화물선 우선적취제도의 미적용 등 서비스부문의 업그레이드를 지속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연되고 있는 제2차 공동위(joint committee)의 조기 개최가 필요함.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대중화로 소프트웨어가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한·인도 CEPA에서 확보한 85개 IT부문 전문가의 인력이동 양허조건을 특히 국내 중소 IT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국내 은행지점 설치 양허기간 연장 및 시청각 공동제작 부수협정 체결**

- 한·인도 CEPA에서 확보한 발효 후 4년 이내 10개까지 은행지점 설치에 대한 인도의 우호적 고려는 양허기간 연장이 필요함. 현재 3개 지점 개소 및 승인이 대기 중이며, 2013년까지 7개 지점의 추가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양국이 공동 제작한 시청각물을 국내 제작물로 상호 인정하기 위한 부수협정 체결이 필요함. 국내 영화관람객 1억 명 돌파, 세계 6위의 인도 영화시장(티켓판매, 2011년 기준), 양국 시장의 높은 성장성과 해외진출 수요 등을 감안할 경우, 양국 간 공동제작의 시너지는 매우 클 것임.

[그림 2] 한·인도 CEPA 활용 및 효과 극대화 방향



자료: 저자 작성.

**3) 내수선점을 위한 투자진출 지원 강화**

● **M&A 등 공격적인 투자진출 지원**

- 거대 소비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에서 경쟁국, 특히 일본에 비해 투자 규모 및 순위, 진출

기업 수 등이 매우 저조한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M&A 등 공격적인 투자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주싱가포르 인도 상공회의소 산하기관으로 양국 간 교역을 알선하는 Trade Match와 같은 가치 'Korea-India Investment Match'와 같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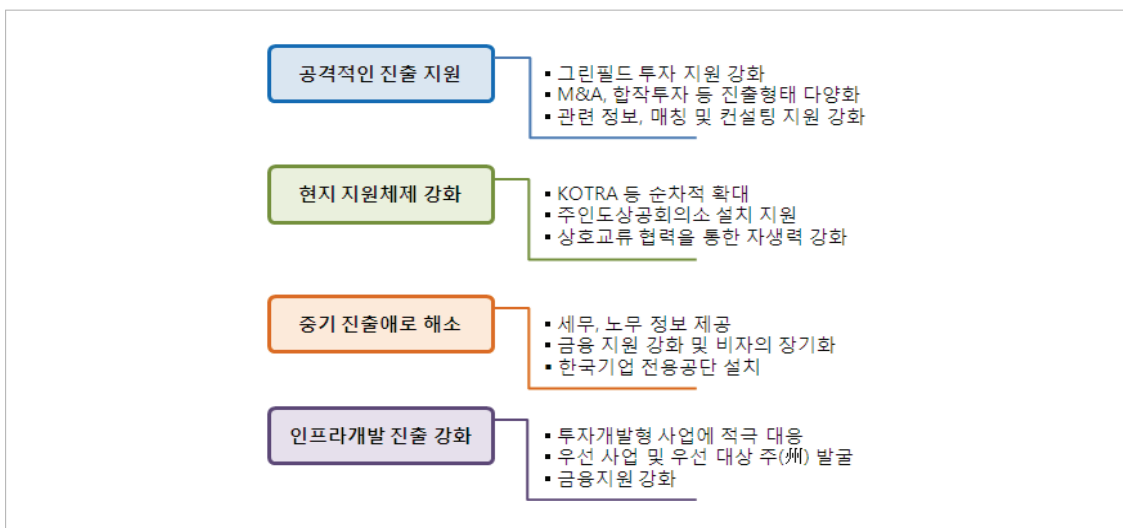
● **현지 지원체제 강화 및 중소기업 진출애로 적극 해소**

- 일본 JETRO와 싱가포르 IES는 구자라트, 라자스탄, 타밀나두 주정부 및 주정부 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자국기업 전용공단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은 인도의 복잡한 세무 및 노무 정책과 제도, 입지여건 악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 금융지원, 장기비자, 한국기업 전용공단, 현지투자지원센터 등의 지원을 우선 요청하고 있음.
- KOTRA, 중기청 등을 통하여 세무 및 노무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투자지원정보 서비스 강화, 인도의 중소기업 관련 부처 및 각종 상공회의소, 민간 기업 등과의 교류협력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며, 주인도 상공회의소 구축 지원을 통해 진출기업 DB를 구축하고 투자진출 지원센터 및 대정부 채널로 활용해야 할 것임.

● **인프라부문 진출지원 강화**

- 인도는 2012년부터 시작된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에 인프라 확충부문에만 2011년 GDP의 절반 이상인 1조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한·인도 정상회담에서도 우리나라의 인프라개발 참여를 적극 요청함.

[그림 3] 내수선점을 위한 투자진출 지원 방향



자료: 저자 작성.

- 일본 등에 의한 대규모 ODA지원 사업에 대한 단순 도급형 사업참여 확대는 물론, 국내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투자개발형 사업참여를 위한 지원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임.

#### 4) 한국기업 전용공단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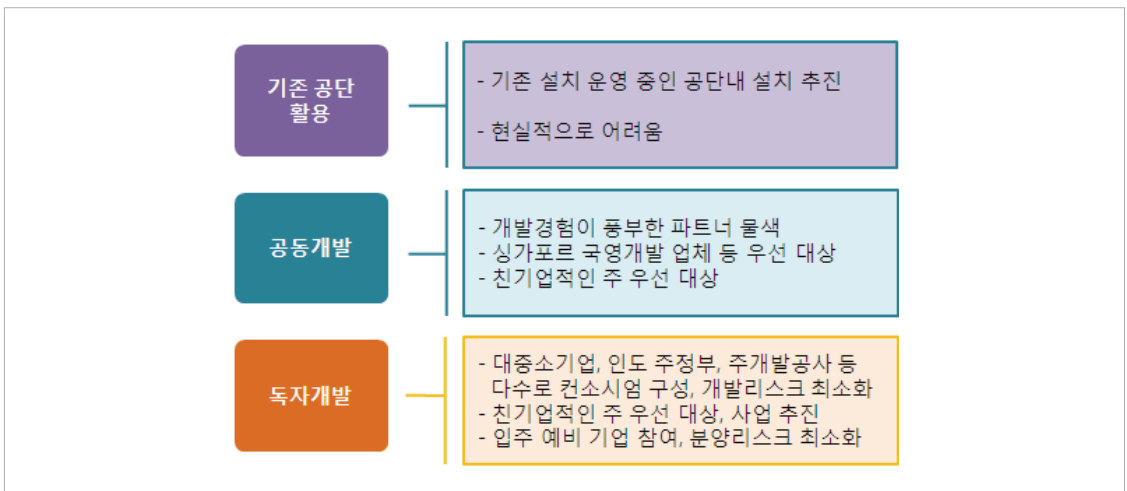
##### ● 싱가포르 등과의 공동개발

- 인도의 타타, 릴라이언스 그룹은 물론, 우리나라 포스코 등도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일본 및 싱가포르의 공단개발 사례는 자국기업들의 인도 진출을 가장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높이 평가할만함.
- 인도 내 공단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공동개발자로서의 참여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싱가포르 국영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공단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 인도 주정부 또는 주정부 산하 개발공사와의 공동개발

- 개발 및 분양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참여자 즉, 공기업, 대기업, 금융기관 등은 물론 입주 예정 중소기업, 인도 주정부 및 주정부 산하 공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외국기업과의 공단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친기업적인 구자라트, 마하라스트라, 타밀나두 등과 같은 주정부를 우선 파트너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대규모 공단보다는 중소형 공단 개발을 조기에 성공시켜 다른 지역 혹은 주로 확산하는 전략이 현실적임.

[그림 4] 한국기업 전용공단 추진 방안



자료: 저자 작성.

